

대학 개혁과 언론

유 일 상 /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 개혁의 개념,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 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글머리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루하루 갱신되듯이, 대학과 언론도 세상처럼 갱신되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슬한 변화에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생활세계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지략의 성체가 시장경제사회체제에 있으니 그 곳이 곧 대학과 언론이다. 대학과 언론은 모두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을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는 도구인 말과 글을 통해 사회와 자연에 대한 연구성과

를 내놓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환경감시의 결과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기지이다. 이 기지가 지금 생활설계에서 발전한 개혁의 폭격기로부터 맹타를 당하고 있으며, 역사의 동력인 막강한 생산력으로 완전무장한 개혁세력의 상륙전 요원들이 드높은 사기로 지덕을 겸비한 시민군 사령관의 상륙명령만을 기다리며 전투 배치되어 있다. 거기에 외국대학이라는 외인부대가 선진교육이라는 신병기로 우리 대학과 언론을 집중공격하는 백병전을 가열차게 벌일 채비를 완료하였다.

이상이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기성대학과 기성언론의 현장상황을 필자의 상륙함 승무경험을 살려 극적으

로 재구성해 본 오늘의 모습이다. 대학과 언론이 사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자기 갱신을 거듭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과 언론은 낡은 먹이사슬로 이루어진 구시대의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매우 딱딱한 껍질로서 기득권의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이들 양대집단이 자신들의 찰라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집착해 왔음 또한 추차가지(推此可知)라 하겠다.

이제 대학과 언론은 하루가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의 물리적 생산력 발전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제는 이들 모두가 최후의 개혁대상으로 손꼽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의 논증은 이제 대학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논제로 하여 개혁 대상인 대학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고 개혁의 주체와 그 역량을 타산하면서 개혁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육』지를 통해 이미 대학 설립의 자유화(1990년 1월호, “대학 설립은 자유롭게”)와 편입학 제도의 전면 시행(1990년 7월호, 지상토론)을 주장하여 5년 후를 예측한 전과(?)가 있다. 한편, 제2캠퍼스 독립과 학점교류제에 대한 제안(1988년 11월호), 민주화 시대의 대학신문(1989년 9월호)을 비롯하여 대학신문의 위상정립 제안(1992년 11월호, 지상토론)을 내놓은 바 있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대학과 언론의 개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학점교류제 실시와 대학신문의 위상정립은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한국 대학의 주요 모순 가운데 하나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대학과 언론의 두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앞으로 굴리며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 개혁의 방법과 전망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몇 가지 문제들을 던져 보겠다.

2. 대학 개혁의 대상과 언론

1) 개혁의 필요성

사회 전반에서, 특히 경제계에서 개혁은 초고속도로, 매우 강렬하게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변혁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유독, 정보사회의 주역을 자임하는 언론과 대학은 요란한 구호에 비해 아직 괄목할 만한 개혁작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 주된 까닭은 이 두 기구가 상호의존적인 제도로서의 오랜 역사와 전통적인 교류로 다져 온 유대관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두터웠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제도의 틀 안팎에서 보수와 진보가 늘 대립물로서 투쟁해 왔고 이 두 제도가 마련한 대화의 광장에서 마침내는 서로 다른 사상과 의견이 하나가 되면서 새 시대를 이끄는 개혁의 원리들을 생산해 온 터였으므로 이제는 대학과 언론이 자기 몫을 해야 할 때이다.

말하자면 언론은 이제 사회 개혁을 위해 대학과 갈라서는 건전한 분열을 해야 한다. 대학 환경을 더욱 예리하게 감시·비판하면서 대학 개혁의 주체들이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긍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대학은 교수·학생·직원 등 서로 다른 지

위와 본분을 가진 3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사이의 명확한 관계설정과 각개 주체의 임무완성이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이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적 자본의 교육목적선택에 의하여 공교육을 운영하게 된 학교재단이라는 법인이 교수·학생·직원의 3자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주체가 된다. 대학의 개혁은 따라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대학의 개혁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의 교주라고 일컬어지는 재단의 개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학 개혁의 개념 및 대학 개혁의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학 개혁의 총론

그렇다면 현재 대학 개혁의 대상과 목표는 무엇일까? 필자는 사학의 경우에 재단을 비롯하여 대학의 3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이 대학의 이상인 새시대의 아카데미아(Academia)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모두 바꿔야 할 만큼 개혁 대상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 왔다.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이 살았던 고대노예제 사회의 유물이지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하나된 학문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사회의 유익한 인재를 배출하는 엄숙한 학원이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통해 대학의 이상을 재발견하자는 의미를 갖고 이 단어를 떠올려 보았다. 오늘의 대학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대체로 단절되어 서로 따로 놓고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총체적 삶의 양식인 문화는 수업시간을 기준선으로 하여 단절되어 있다. 이 기준선을 연장하거나 이 단절을 메워 보려는 교수·학생들의 노력이 오히려 이단시되어 왔고 교수와 학생의 하나됨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찾아질 수 있는 언어관념이 되고 말았다.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연결하여 그 조화를 이룩하고 교수여건을 개선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조건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교육부 및 그 하부기관의 각종 감사와 유·무형적인 간섭 때문에 늘 긴장상태에 놓여 있으며 관료주의적 위계구조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없다. 사학의 경우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 재단의 인사권에 자신의 신분을 맡기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의 보직이나 승진 등에는 재단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교육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조직성원들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이 사회발전에 조응한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지식과 태도를 연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대학 개혁이라는 요란한 구호에 걸맞게 대학이 실질적으로 개혁·변신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적 조건에 친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수로부터 시작하여 교수환경 전반의 불합리성과 전근대성이 불식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의 대학은 감정의 복원을 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앞서 차가운 이성이 간절한 만큼 요구되는 모더니즘의 영역을 더욱 치열하게 개척하되, 사회환경의 미화원으로 손색없는 자기주변의 정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3) 대학 개혁의 각론과 대학 현실

현재의 대학 환경을 교수의 지위, 교수의 직능, 피교육자인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 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현실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학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늘 불안하게 하는 장애물의 천지이다. 대학의 교수는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피교육자인 대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끊임없이 지성을 연마하여 삶의 질을 내용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고뇌와 함께 대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진실에 따라 말하자면 교수가 되는 것은 교수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강의능력과 연구실적에 대한 검증에 의해 필요한 인원만큼 공정하게 임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수준은 매우 등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교수와 전직을 희망하는 교수 등 교수지위를 결정하는 교수임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각 대학의 교수에 대한 대우를 비롯하여 피교육자의 수학능력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도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더 나은 교육요건과 교수조건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의 임용과 전직은 전술한 바와 같은 합리적 기준이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학교수의 임용은 모교 출신을 제1순위로 하고 학연·지연에 따라 소집단 이기주의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그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과에 먼저 임용된 교수가 있으면 그가 30대든 40대든 간에 대체로 자신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을 뽑으려 하고 심지어는 선임 교수들이 마음대로 부러먹을 수 있는 '마당쇠'급 교수를 뽑는다는 대학까지 있으니 대학교수 채용에서의 기준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학과의 결정을 뒤엎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나, 그것은 재단 또는 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부의 권력 또는 각종 조종기관의 압력일 때가 흔하다. 다만 필자는 대학교수의 선발이 반드시 공개채용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초야에 묻힌 선비들을 등용하는 방법으로 유일천거제(遺逸薦舉制)가 있었다. 약칭 일천제(逸薦制)라고 하는 이 제도의 의미에 대해 조선조 개국공신 정도전은 "선비로서 재야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도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능을 품고 있으면서도 발탁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에 있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구하고 성실히 찾지 않으면 스스로 나와서 등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예를 갖추어 이들을 불러내야 하며 관작을 높게 주어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 세세년년 진리일 수는 없지만, 오늘의 혼탁한 교수임용제도를 보면서 대학 운영의 최고책임자에게 한 번쯤 귀뜸해 주고 싶은 말이어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심정으로 여기에 삽입해 둔다.

한국의 신문광고 중에서 필자는 최대의 허위과장광고가 교수채용 광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수를 채용한다고 공개적으로 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임강사나 조교수만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허위과장광고의 관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고된 채용 전공분야의 교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교수와 연줄이 안 닿거나, 교수의 자질로서는 중시되지 않아야 할 사교성이 부족한 자 또는 처박혀 책이나 읽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연령제한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3자를 내세워 복수추천한 뒤 채용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인사권자로 하여금 채용 판단을 중지하게끔 묘책을 짜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히 대학이 홍보의 수단으로 교수채용결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관인 것은 선발된 사람들의 박사학위 취득학교를 소개한다고 하여 외국대학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대학이 상품을 파는 기업 이상으로 교수요원에게도 외국상표를 붙여야 교육수요자에게 잘 팔린다고 생각한다면 학문의 자주성을 운위하기 이전에 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하기는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니 피교육자를 단순한 상품소비자로 생각한 대학 경영자가 상표차별화를 통해 피교육자에게 교육자인 교수를 교육상품의 하나로 광고소구(appeal)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상품화된 지식을 팔고 사는 매매행위가 아니고 더더욱 대학이 시장바닥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대학간

의 시장경제원칙을 부인하거나 경시하지는 않지만, 대학간의 경쟁과 대학의 교육은 그 성격이 판이한 사항이다. 대학 운영자들이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를 선호하는 것은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공백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감성적 인식 수준이 낮음을 역이용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을 혼동케 하여 대학교수 자체를 상품화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이 주장을 공박하고 대학교수를 매춘부처럼 피교육자에게 팔아넘길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외국대학 학위취득자에 대한 임용우선 시도 자체를 영원히 중단해야 한다(선진적 과학기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피교육자로서 대학교수로부터 감동감화를 받아 인격을 연마하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전수받고 의식을 높이려는 것이지 찰라적으로 피교육을 즐기려는 처지가 아니다.

특히 외국대학들이 분교·단기과정·통신교육 등을 통해 국내에 상당수 진출하여 있고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외국대학의 정규과정마저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 큰 시점에서 강의 능력에 대한 검증과 연구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신출내기 외제 박사를 선호하는 대학들의 열등감을 보면서, 외국교수들을 국내에 초빙하여 내용도 별로 없는 외국의 이야기에 야단법석을 떠는 것으로 비애를 느끼는 동시에 어린 시절 미군부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양색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필자가 지나친 것일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외국어 문학이나 외국학을 제외한 전공자들은 문헌접근이 어려운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내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성과 축적이 엄청난 만큼

대학 운영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사팔뜨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실상 타대학으로의 전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수시장 상황은 학문공동체 내부의 자유로운 경쟁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으며, 만 65세까지의 정년 보장도 교수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의 교수들은 식민지교육과 군사독재하 교육을 통해 숙지한 생활적응능력을 교수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및 창조적인 능력의 계발과 인간다운 도덕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발전의 능동적 주체를 양성하는 데는 그들의 교육적·피교육적 관성이 스스로의 갱신을 제한한다.

둘째, 교수의 직능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실 문제들을 들춰 보겠다. 교수의 직능이 강의, 연구와 봉사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강의를 해야 하고, 학계를 향해서는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하며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은 연구자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어서 천차만별의 지식 수준을 망라하는 교수집단의 평가는 먼저 정량성 평가가 우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길 높은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좋은 강의를 하면 뜻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 이것 역시 무능하고 게으른 교수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물론 교수와 학생 간에는 학점이라는 변수가 있어 수강 학생수 자체가 강의의 질을 평가하는 유력한 기준이 아님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헛갈리게 하는 문제 중에는 학부제와 전공과목에 대한 집착이 있다. 학부제는 각 분과학문간의 벽

을 허물어 사회현상을 비롯한 세계인식의 전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학 발전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전공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당국의 타성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전면적 시행이 가능한 한 미뤄지고 있고 대학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목표가 발전적이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피교육자들의 자율적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되더라도 특정학과에는 학생이 집중되고, 특정학과에는 학생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머지않아 학과간의 담이 허물어지면,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에 학과의 교수는 학부든 대학 전체든 간에 자신의 강의 과목과 내용으로 자신의 강의 역량을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국 대학간 완전한 학점교류제가 실시된다면 전국 각 대학의 교수가 자기 과목을 수강할 학생들이 대기하는 지방을 옮겨다니며 강의를 할 수 있어 교수강의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되고, 학생들의 수강범위도 넓어져 사교육기관인 대학생 수강학원과 공교육기관인 대학의 통합도 가능해질 수가 있고, 대학의 수준을 다함께 높이면서 교수와 학생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더욱 정확·공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오늘의 대학은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수강선택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가 '95년 8월에 준비하여 공표한 교육개혁 추진계획에는 1998년부터 ①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평가원이 학점을 종합관리하고, ② 전과와 편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학교간·학과간 이동의 자유를 넓히며,

③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수강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의 적시적절한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수강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라도 확대할 수 있다면 대학 개혁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경우, 특정 교과목을 최소전공과목으로 정하고, 특정 교수에게 이 과목을 고정 배정한다면, 이 제도는 고차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편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소전공과목은 많아야 3~4과목 정도로 하되, 각과 교과목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게 하고, 전임교수들이 순번을 정해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학생들로서는 거의 완벽한 교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필자가 속해 있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분담하고 있는 신문방송학과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부분의 심화학습을 원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역시 전공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함께 당해 직종에 대한 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요구들이 정당하므로 신문방송학과와 학습내용도 언론보도전공, 편집출판전공, 방송연예전공, 정보통신전공(telecommunication과 뉴미디어), 광고홍보전공, 커뮤니케이션이론 전공 등으로 세분하여 계통적인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곧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공급자의 도리이다.

피교육자가 원하는 교과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수방법을 계발하고

세련화하는 것은 바로 대학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연구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다. 각종 재단이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과제를 공모하고 있으며 행정편의에 따라 대체로 연초나 학기초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부교수급 이하의 교원들은 교수승진을 위해 논문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한 조건이라면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기대되는 효과 등을 동일분야의 제3의 공평한 연구자가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을 가진 정교수에 대해서까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관이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심사하는 것은 자칫 연구제공기관에 교수들의 자율적 연구를 예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연구비를 제공할 대상 교수의 연구능력과 연구실적을 충분히 정밀조사하여 특정 연구과제를 정중하게 의뢰하는 것이 연구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좋을 듯하다. 공정성이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대우하되, 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혜를 되새겨보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는 선비의 대명사로 꼽힌다. 정교수쯤 되면 연구지원비를 달라고 재단에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일이 떨떠름할 수도 있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검색이 쉬운 세상에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는 누구누구가 적격이라는 것쯤을 연구재단에서 정보조

회를 통해 어렵잖게 알 수 있으므로 연구 적격자에게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언론은 대학 개혁의 전개방향을 국민 각 계각층에 알려 대학 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얻어내고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이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 환경을 감시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은 현재 그들 스스로가 낡고 썩어 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해 줄 능력이 없다. 현재의 언론은 다수의 큰 목소리만을 대변하기에 바쁘고, 현재의 사회상태에 대해 보수적 의견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발전에 대해 진보적 의견을 가진 사람의 관심과 의견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의 우리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대학을 개혁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말할 것도 없이 언론 개혁이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상이 각축하며,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언론매체들이 앞다투어 시민들에게 공개토론의 장을 넓혀주는 일이다.

3. 맺음말

대학 개혁의 성패 여부는 언론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대학 환경 감시와 함께 대학과 시민사회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제휴하도록 언론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부분간의 상관 조정을 해주는 데 달려 있다. 언론은 대학의 비리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여 대학이 흔들리지 않는 도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학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색안경을 쓰고 판별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언론은 그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정화부터 해야 마땅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눈치보기를 중단해야 하고, 독점자본의 협력자로 자기 이익 챙기기를 멈춰야 하며, 단편적이고 사전적인 지식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을 종합하는 지식을 갖추려고 애써야 한다. 대학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언론 개혁에 대해 몇 가지 소견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쳐야겠다.

첫째, 언론계의 상층부에 포진한 인사들은 군사독재정권의 충실한 협력자들 또는 기회주의와 출세주의로 우리 언론계의 순수성을 더럽혀 온 언론인들인데 이들은 이제 절필을 해야 한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一口二言은 二父之者)라는 옛말처럼 군사독재정권과 민간민주정권은 그 성격이 판이한데, 어찌하여 '그 때 그 시절'의 언론인이 개혁의 전도사처럼 오늘 다시 목청을 돋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운위하는가? 당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직장을 쫓겨난 수많은 언론인과 자유로운 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 사람들이 지켜온 도덕적 고결성을 빛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구시대 언론인은 이제 더 이상 후배들을 헛갈리게 하는 이데올로기 노릇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 언론인들은 진보적 학문의 연구성과를 배우고 익히는 데 애씀으로써 대학 개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야 스스로도 개혁된다.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냉엄정확한 인식에 근거하여 보도와 논평을 행할 때 언론은 개혁과 상반되는 오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속도경쟁 때문에 솔한 오보를 내고도 언론은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것 역시 언론의 보수적인 권위의식 때문인 것이다. 이 권위의식은 언론인의 자기개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므로 속히 깨뜨려야 할 낡은 형식이다.

셋째, 언론인이나 대학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두뇌능력이 저하된다는 자연적 사실을 인정하고 정년연장을 도모하거나 꼭 정년을 채우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신진 언론인과 신진학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는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언론에서 오는 기득권을 능동적이고 유쾌한 기분으로 포기할 아량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법칙의 지배로부터 언론인과 대학인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교만이다. 이 교만은 변화 발전하는 객관세계의 조건에 맞추어 젊고 진취적인 새세계에서의 경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중인 사회개혁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넷째, 언론과 대학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꽃피우는 지성의 도량으로 상호협조해야 개혁은 뿌리를 내린다. 사회 속에 굳게 자리잡은 봉건적 유습과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행들은 그 물리적 관성 때문에 개혁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거부반응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제압하기도 하면서 언론과 대학은 한발 앞서 사회체계의 전반적 개혁과 개혁의 지속을 가능케 할 새로운 균형상태의 조정을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

유일상/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석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보도국 기자,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를 지내고, 현재는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벌거벗긴 한국언론』, 『매스미디어와 열린 세상』, 『사람과 방송』 등이 있고, “국가 위기상황과 보도의 자유”, “언론법제연구의 성격과 방법”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